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

2026. 7. 8.



기후에너지환경부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비전 및 추진방향	5
IV. 주요정책과제	6
1. 지역주도 이행체계 혁신	6
2. 지역 이행모델 확립 및 실천강화	11
3. 지원 기반 재설계	20
V. 기대효과	23

I. 추진 배경

◇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수

-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위기이나, 지역별로 취약성,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지역마다 기후 취약성과 노출이 다르게 발현,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을 권고(IPCC, '22)

- 지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지역 고유의 대응 전략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

◇ 민선 9기('26~'30) 출범과 함께 신속한 녹색 인프라 구축 필요

- 2035 NDC 발표('25.12), 제1차 재생e 기본계획 수립('26.5)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등 전면적인 녹색 대전환 추진 중

* 수도권 : '26.1.1일 , 수도권 외 : '30.1.1일

-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에서도 에너지·폐기물·수송·건물 등 녹색 인프라 확충의 적극적 이행이 요구됨

◇ 지방정부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지원, 온실가스 감축효과 극대화

- 실효성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계획, 중앙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이 모두 중요*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정합성이 30% 이상 향상될 수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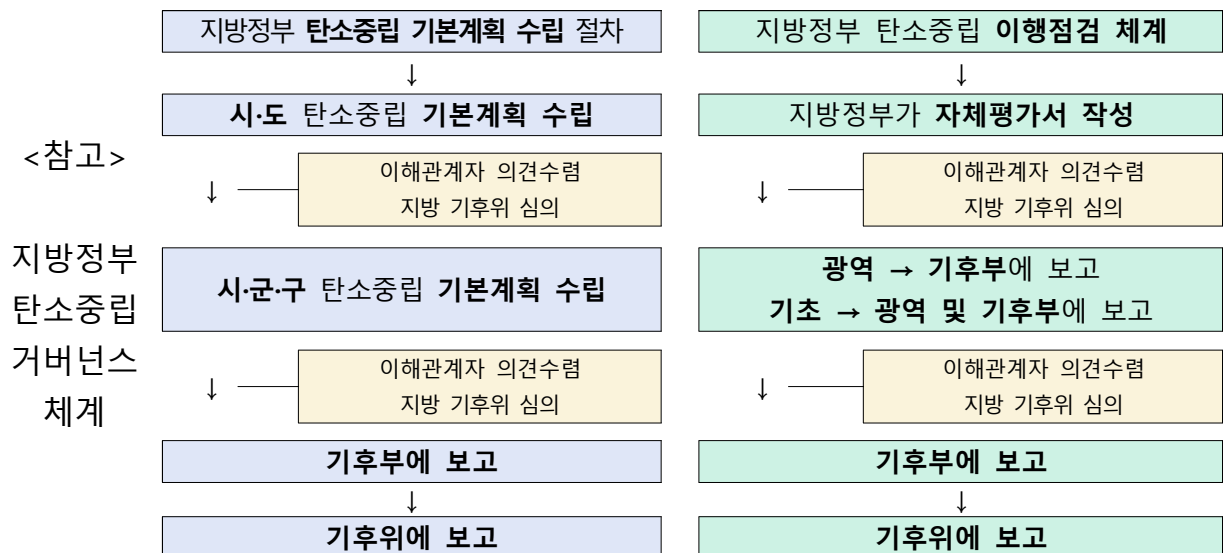
-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활성화를 바탕으로, 효과적 탄소감축 이행 체계 구축 및 사회·경제 전반의 탈탄소 가속화

◆ 지방정부 탄소중립 전략 수립, 실행 기반을 확충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고, 녹색 대전환 성과 창출에 주력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거버넌스)** 탄중법에 따라 광역·기초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 시 지방 기후위의 심의를 거쳐 기후부에 제출, 기후부는 국가 기후위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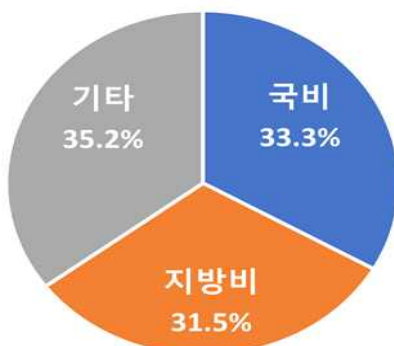


- **(예산)** 지방정부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29년까지 약 313조원 집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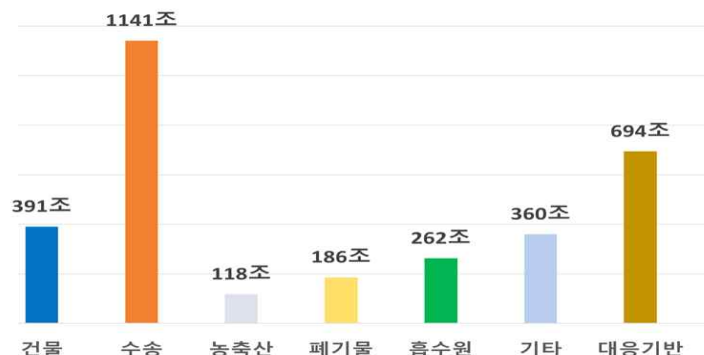
- 재원별 예산은 민간투자 등 기타 재원이 가장 많고, 국비 비중도 높은 편이며, 지방정부 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 탄소중립 사업의 약 36.2% 이상이 수송 부문에 집중, 그외 대응기반*(22%), 건물(12.4%) 부문 순으로 투자가 많은 편

* 정의로운 전환, 지방정부 관리권한 외의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 재원별 예산('25~'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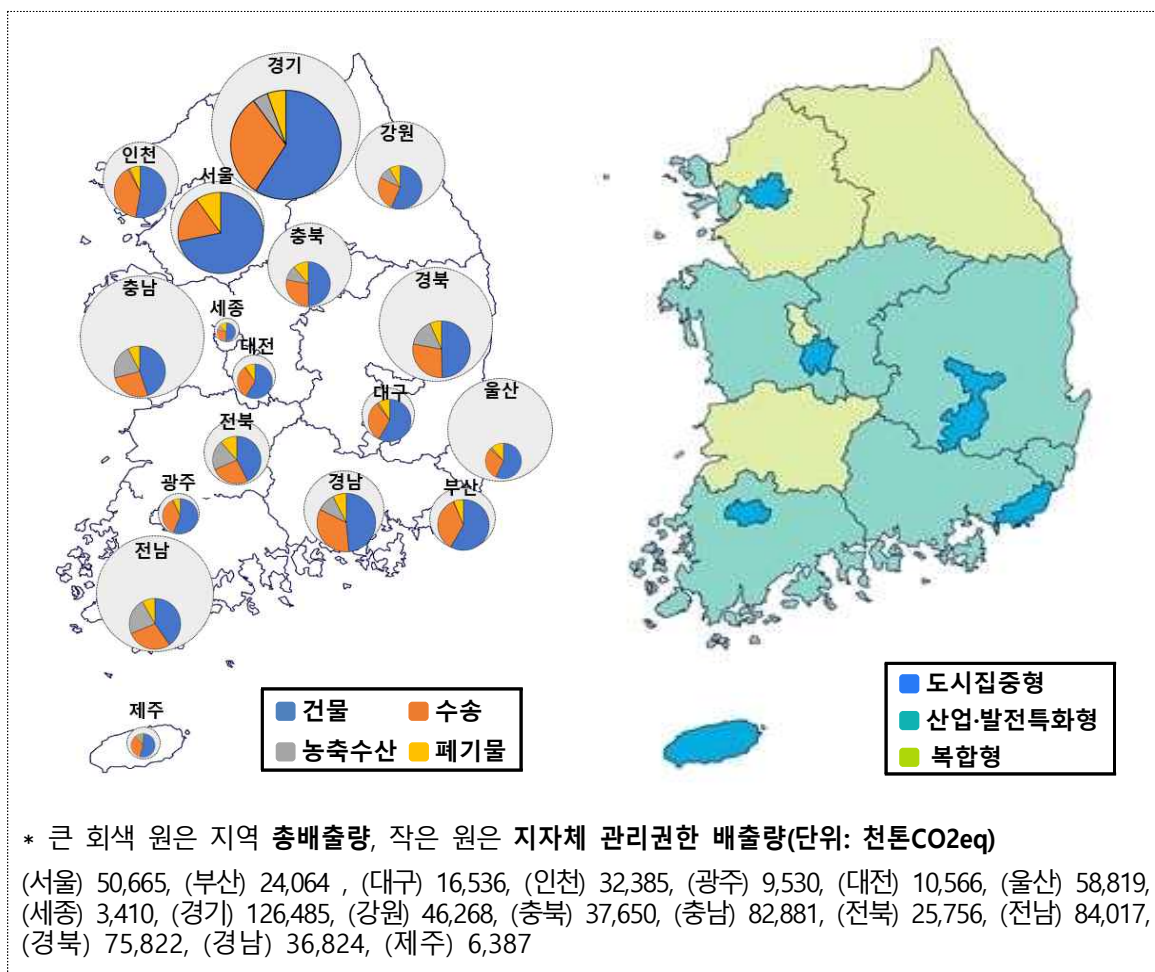


【 부문별 예산('25~'29년)】



- **(지원체계)**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확대 중
 - 지역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모델 개발 등 지방정부별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 위탁·운영중(광역시 17개소, 기초 39개소 운영 중)
- **(감축목표)** 광역 시·도는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24.4), 2030년까지 약 135백만톤(관리권한 배출량의 약 42.7%)을 감축하겠다는 목표 제시
 - **(지역 총배출량)** '24년 기준 지역 총배출량은 728.1백만톤
 - **(관리권한 배출량)** 광역 시·도에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있는 배출량*은 316.6백만톤으로 지역 총 배출량의 약 43.5%에 해당
 - * 전력수급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등 국가 주도로 배출량이 관리되는 전환산업부문을 제외한 수치
 - **('24년 감축실적)** 11.2백만톤의 온실가스 감축(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대비 약 8.27%)

【 '24년 기준 시·도 부문별 배출 비중 및 배출유형 】



2 문제점

□ (이행체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체계·전담조직 미흡

-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평가보고서 수립 절차는 광역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후위 보고로 구성, 별도의 검증, 숙려 절차가 없음
- 국가-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간의 정합성, 기초 지방정부의 이행 여건·역량 향상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연계 미비

* 시·군·구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광역 시도 및 지방 기후위 의견 반영 등 환류체계 필요

- 단체장이 참여하는 지역간 정책 협의체, 지방정부 내 전담 조직·담당 인력의 전문성 등이 부족하고 지역간 협력·소통체계 부족

□ (인프라·실천) 탄소중립을 견인할 인프라·감축모델 도입에 소극적

-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흡수원 확대·전기차 보급 등 일부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
- 에너지·폐기물·수송·건물·흡수원 등 주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한 녹색 인프라 구축에 소홀*

* 지방정부의 인적·물적 자원과 인프라 부족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여건 부족(국가 녹색기술연구소 데이터센터, '24.6)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탄소중립 모델을 활용한 지역 경제·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정보·예산) 지역, 분야별 통계, 인력, 예산 등 이행기반 미비

-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활용이 제한적이고 감축원단위의 비일관성·부정확성*으로 감축 효과에 대한 신뢰성 한계

* 지방정부의 배출량 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 감축 성과 비교를 위한 정확한 통계 부족(KEI, '18)

- 지방정부의 예산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의 연계성 점검을 위한 방법, 체계*와 지역의 탄소중립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지자체 모두 시행 대상이며, 국가재정법 개정('21.6)으로 국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 중

** 지방정부 탄소중립 업무가 소수 인력에 배정, 에너지·교통 등 사업부서와 협업구조 취약, 소규모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사업을 기획·추진할 인력 부족(KEI 환경정책 학술지, '26.1)

- 담당 공무원의 보직 이동에 따른 전문성 향상에 한계가 존재하며 소규모 시·군·구 단위에서는 탄소중립 인식과 역량을 동시에 향상 필요

Ⅲ.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지역의 7대 녹색 인프라 사업 추진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본 방향	1 지역주도 이행 강화 2 7대 녹색 인프라 역점 지원 3 탄소중립을 위한 정보·재정·역량강화 지원		
주요 정책 과제	1 지역 주도 이행 체계 혁신	1 전략수립·이행 체계 개선 2 거버넌스 개편 3 지역별 이행 전략 수립	① 시민 참여형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② 이행점검시 지역기후위/광역지자체 역할 증대 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재편 및 활성화 ② 지자체 내 단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③ 지방 유역청과 탄소중립 센타지방정부 연계 강화 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역 거점화 및 광역 연계 강화 ② 농촌형·도시형·산업형 이행 모델 구축
	2 지역 이행 모델 확립 및 실천 강화	1 7대 녹색 인프라 사업 추진 2 감축 모델 발굴·확산 3 성과 환류	①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유희부지 등 발굴 ②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 확충, 다화용기 사용 확대 ③ (수송) 모빌리티 전동화 지원 및 제도개선 ④ (주택건물) 제로 건축물 확산,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⑤ (흡수원) 나무심기 및 목재 사용 활성화 ⑥ (기후적응) 기후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⑦ (시민실천녹색일자리) 기후시민행동과 녹색일자리 창출 ① 감축효과가 큰 사업 모델 리스트 구축·제시 ② 시민 실천 연계 감축 모델 발굴 및 감축 연계 ① 광역중심 감축 리그 개최 및 포상 ②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공 모델 확산
	3 지원 기반 재설계	1 정보 지원 2 예산 지원 3 역량강화 지원	① 지역 온실가스 배출 정보·통계 고도화 및 제공 ② 지역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개발 및 제공 ① 지역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 ② 감축 실적에 따라 예산 인센티브 부여 ① 기본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컨설팅 제공 ② 지역 탄소중립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IV.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1 전략수립·이행체계 개선

①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 국가-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간 정합성 제고

- **(지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용,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반영한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침**’ 마련

*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26.下), 광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초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7)

** 백화점식 과제의 나열을 지양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위주로 구성하여 실행력 제고

- **(자문절차)** 지방정부 요청 시, 기후부 소속 지방청이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 방향, 이행 전략 발굴 등 자문을 수행하는 절차 구비

*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권역별 컨설팅(대면회의, 공단)에 지방청 담당자가 동행하여 자문 제공

□ 지방정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여건 조성

- **(예산 지원)**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 연구용역 비용* 지원

* 광역 1.8억원(국비 9천만원), 기초 1억원(국비 7천만원) 지원을 위해 '27년 예산에 반영 추진

- **(개별 컨설팅)**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교육, 지방정부 담당자에 대한 개별(1:1) 컨설팅 제공(환경공단, '27~)

- **(지원시스템)** 장기적으로는 전문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 구현

* 담당 공무원이 기본계획 내용을 입력하면 과제별 이행률, 감축량 추정치 등이 자동 산정되어 보고서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발(온실가스정보센터·환경공단, ~'26.12월)

② 지방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점검시 지방 기후위·광역 지방정부 역할 확대

□ 지방 기후위원회의 설치 확대 및 정례 회의에서 이행 점검

- **(지방 기후위 확대)** 모든 지방정부가 지방 기후위*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점검

* **(설치 현황)** 광역 17개, 기초 156개 지역에 지방 기후위 설치 완료, 기초 70개 지역(대전 대덕구, 경기 남양주시, 강원 양양, 충북 보은·음성 등) 미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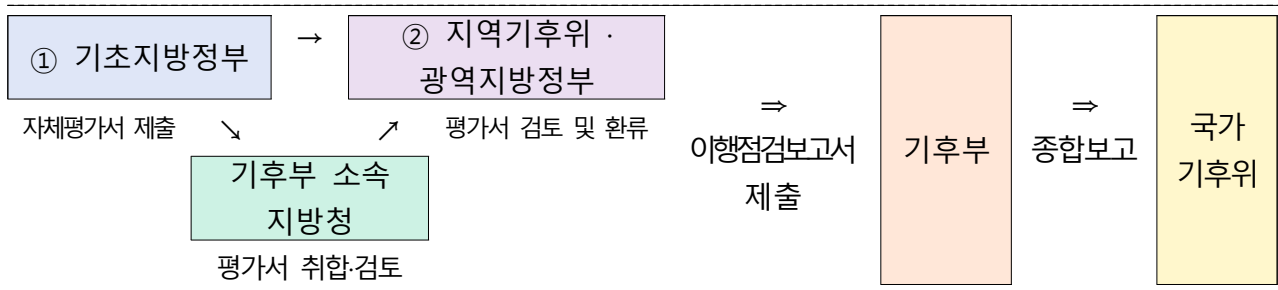
(역할) 탄소중립 비전·감축 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이행 점검 등(조례)

- (광역 지방정부 기후위) 시의원,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
-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 구의원, 5급이상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탄중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결과 점검보고서를 작성, 시·도 지사는 기후부에 제출, 시·군·구청장은 시·도 지사 및 기후부에 제출

- **(심의·의결 절차)**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점검시 기초 지방정부는 지방청과 광역 지방정부·지방 기후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심의 절차 마련

< 지방 기후위 및 광역 지방정부 역할 확대(안) >



* (지방청의 역할) 중앙정부·환경공단이 제공한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현황,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

□ 지방정부의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지원 및 벤치마킹 촉진

- **(작성지원)** 기후부는 지방정부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감축량 산정툴** 등 제공

* **(지원내용)** 지방청 담당자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분야별 배출량 통계 특성, 관내 배출원 현장방문 등 현장밀착형 교육기회 제공

** **(산정툴)**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수록한 과제별 이행률, 세부 과제별 예상 감축 잠재량, 이행실적 등 지원시스템 개발 완료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중

- **(벤치마킹)** 지방청이 광역·기초 지방정부 기후위원회 간 정례회의(연 2회)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한 배출특성을 가진 지역 간 벤치마킹 유도

* 국가 기후위원장 주재로 중앙-광역 기후위 정례회의(연 1회) 추진 중

② 거버넌스 개편

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재편 및 활성화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조직재편 및 운영 활성화

- **(조직재편)**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성을 재편

* (現) 수원시 주도(기초 회장) 기초 지방정부 30개 단체장 참여 → (改) 광역·기초 모든 단체장 참여

- **(활성화)** 광역·기초 단체장 중에서 각각 복수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공동 사무국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매년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여 추진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정례 컨퍼런스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동 실적이 많은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기후테크 사업화 등 국비매칭 사업시 우대하는 방안 검토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 **(중앙-지방 협력)** 중앙정부(기후부·기후위)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간 간담회 추진(연 1회) 등 상호 의견 교류 및 협력 활성화

* 국가 기후위의 지방분과위원회 회의에 지방정부 실천연대 위원장, 담당자 등 초청하여 의견 수렴

- **(정례 회의)** 단체장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 회의를 개최(연1회)하고 지역간 협력방안 모색, 우수사례 공유, 광역-기초 연계 강화 등 역할 확대

② 지방정부 조직 내 단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 지방정부 내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체계 강화

- **(조직구성)**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의 탄소중립 전담부서를 설치,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

* 예시: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 설치(22. 12월~,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 산업과 등 9개과 218명), (광명시) 기획조정실 내 탄소중립과 설치(18. 9월~, 총 17명)하여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업무 전담

- **(전담체계)** 탄소중립 책임관(고위공무원 상당)의 역할을 조례에 반영하고 탄소중립 전담부서의 업무를 통솔하는 등 전담체계 강화

□ 탄소중립 책임관을 중심으로 정책협력 확대

- **(중앙-지방)** 중앙정부 주재(기후부·기후위) 지방 탄소중립 책임관 정책 협의회 개최(연 1회), 탄소중립 국가 전략, 추진방향 등 정책 소통

* (현황) 기후위·기후부-광역 지방정부 탄소중립 책임관 회의 개최('23), 비정기적 (개선) 기후부 주도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 책임관 회의 개최(연 1회씩 개별 추진)

③ 지방 유역청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 지방정부 연계 강화

□ 지방청이 전국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성과 향상을 지원

- **(이행점검)** 지방청(기후에너지현장대응단)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정례 운영위원회·평가위원회에 참여, 연간계획 검토,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의견 제시
- **(협력지원)** 지방청이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지방정부간 업무협조, 소통 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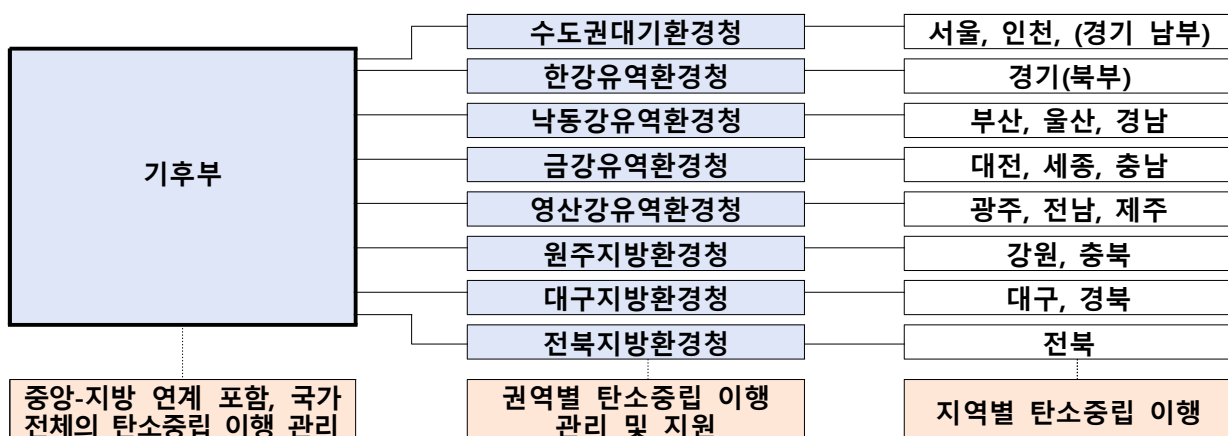
□ 권역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 및 성과 점검

- **(이행지원)** 지방청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현황·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연·미달성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지원
- **(성과점검)** 지방청이 관할 구역 내 지역별 특성(농촌형, 도시형 등)과 부문별 (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감축 모델 반영 여부, 감축 성과 등을 점검

* 폐기물·수송 등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청의 평가 결과를 반영 검토

** 지방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지원 실적 및 성과를 반영하도록 개선

< 추진 체계도 >



③ 지역별 이행 전략수립

①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 거점화 및 광역 연계 강화

- 탄소중립 지원센터 거점화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 지원 강화
 - **(거점화 추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단독 운영이 어려운 기초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26.6)
 - * (1안) 광역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예산·인력을 추가하여 기초 지방정부의 업무를 지원
(2안) 기초 지방정부 3~4곳을 지원하는 거점센터를 지정하는 방안 검토 중
- 광역-기초 탄소중립 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 **(역할 분담)** 광역 센터에서는 지역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활용이 가능한 감축모델 등을 개발하고 기초 센터에서는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하도록 개편
 - **(연계 강화)**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기본계획 수립·이행·감축사업 추진시 적용하는 정보·통계 등이 일원화되도록 연계

② 농촌형·도시형·산업형 이행모델 구축

- 지역 특성별 온실가스 감축모델 개발
 - **(모델 개발)** 지역의 지형적 특성(산, 바다, 도시 등)과 배출유형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환경공단)하여 지방정부에 제공
- * 예시: **(농촌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농기계의 전동화, 수요 응답형 이동수단, 영농형 태양광 등
(도시형) 건물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많은 특성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송부문 전동화 등
(산업형) 재생에너지 산단 조성 등 에너지 전환 모델의 적용 등
- **(모델 적용)**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점 추진하고 모델별 감축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온실가스 감축 유형별 상위 지방정부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선정시 우대 방안 검토

[정책과제 2] 지역 이행모델 확립 및 실천강화

1 7대 역점사업 추진

1 [에너지] 햇빛소득마을·재생e 도입을 위한 유희부지 등 발굴

□ 지역 주도형 재생e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주도 사업)** 햇빛·바람소득마을 등 지역 주도형 재생e 사업을 추진,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및 발전 수익 공유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기반 확대)** 관할지역 내 마을 단위 재생e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 주민 소통 등 추진

*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 선정(연 500개소 이상),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 주택·아파트 지붕·베란다 태양광 설치

- **(도시 태양광 활성화)** 지역 내 유희부지* 및 국민 일상공간** 중심으로 설치 수요를 발굴,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예산(지방비) 확보 등

* 공장지붕, 수상, 도로·철도 방음벽 등 ** 학교, 베란다, 옥상, 주차장, 전통시장
(사례) 중산마을 9단지 (경기 고양시) 10개동 중 8개동 옥상에 총 150kW 태양광 설비를 설치, 생산한 전기를 공용부 전력에 사용하여 연간 37백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 재생e 자가설비 인증 시범사업 추진

- **(체감 제고)** 재생e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RE100 공급 확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추가소득 창출 등 혜택 체감을 향상

*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자가설비용 REC 개념

- **(홍보·참여)** 재생e 자가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추진('26.6~),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 주민 대상 홍보 등 자발적 참여 활성화

□ 도서지역 재생e 전환을 위한 계통 독립섬 RE100 추진

- **(표준 모델)** 도서 지역 에너지를 재생e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e+ESS+히트펌프+EMS 통합 구축 등 RE100 표준모델 마련

- **(여건 확충)** 재생e 발전시설 부지 발굴, 지역주민 소통·홍보 등 추진

* 가파도에 RE100마을 조성사업('26~'27) 추진 중

② [폐기물]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등 인프라 확충

- 소각장·공공 하수처리장·다회용기 세척 설비 등 자원순환 인프라 지원
 - **(인프라 조성)**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 대비 지역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분석, 소각장 적기 확충 및 소각 후 남은 여열을 스팀·온수·전기 공급에 사용
 - * '30년까지 소각시설 53개소 준공 예정(수도권 15개소, 수도권 외 38개소)
 - **(시스템 구축)** 공공 선별장 신·증설, 현대화 설비(광학선별기, AI로봇팔 등) 설치비용 등을 지원, 재활용 선별률 향상 및 순환경제 기반 마련
 - * ▲공공선별시설 신·증설 28개소(강원5, 경기4, 경남7, 경북5, 부산1, 울산1, 전남3, 충남2) 현대화 8개소(강원1, 경기1, 경남2, 전남2, 전북1, 충남1),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6개소(경북4, 전북1, 충북1), ▲기타 3개소(강원1, 경북1, 충남1)
 - **(다회용기 확대)** 카페·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다회용기 인프라(세척기·보관함 등)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별 다회용기 사용 확대
 - * 시설별(카페거리, 스포츠 경기장, 장례식장 등) 표준모델 발굴, 다회용기 도입 지침 개정 등 추진
 - **(공공청사 일회용품 감축)** 공공이 선도하여, 청사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시행 중인 컵 보증금제를 인근 카페까지 확대
 - * '26년 세종 공공청사 시행 후, '30년까지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 **(스포츠경기장)** 야구장·축구장 등 대상 다회용기 전환 및 폐기물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안 제시(~'26.9), 폐기물 감량 등 책임 이행 협약 강화
 - * 기후부, 지방정부, 환경공단 합동 '폐기물 관리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하여 구장별 분리수거, 관리 인력 및 수거 주기 등 점검
 - **(시설 전환)** 노후 공공 하수처리장 전면 개·보수, 상부 공원화 등 기피 시설을 주민 친화형 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
 - * ▲(완료) 서울 안양 등 4개소, ▲(진행중) 인천 의정부, 평택, 천안, 제주, 춘천, 아산, 남양주, ▲(사업구상 중) 서울(3개), 부산, 대구, 성남, 과천, 구리, 포천, 속초
- 가축분뇨 활용을 확대하여 농촌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
 - **(설비 지원)** 가축분뇨 활용 에너지화(돈분바이오가스, 우분고체연료) 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지원
 - **(제도 정비 등)** 고체연료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마을단위 에너지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에너지자립 표준모델 마련 등
 - * '30년까지 바이오가스 시설 411개소, 에너지 자립마을 5개소,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설 58개소 지원

③ [수송] 모빌리티 전동화 지원 및 제도개선

□ 지역별 수요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 확대

- **(보급 확대)**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지역 등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수요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 목표 설정 및 실행

* (예시) 승객의 호출에 따라 운행경로가 조정되는 이응버스(세종시), 똑버스(경기), 행복콜버스(군산), 타바(제주), 불러보령(보령시) 및 마을택시(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등)

- **(활성화 지원)** 수요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을 위한 운영체계·재원* 마련, 이용방법 홍보 등으로 수송부문 전동화를 통한 주민 혜택 체감율 향상

* (운영비용 확보) '25년 이천시 똑버스 기준 약 558,000원/대·일 소요, 수요응답형 전기버스·택시 호출 플랫폼(모바일 앱 등), 승·하차 장소 안내 표지판 설치
(교육·주민소통) 수요에 따라 이동경로가 변동하는 운송수단의 배차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안전수칙 적용, 주민의견 수렴 등 추진

□ 전기차·전기 이륜차·전기자전거 등 이동 수단의 전동화

- **(전기차)** 전기차·전기버스(마을버스·어린이버스) 구입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설치비 지원, 운송 사업자 대상 저리 대출, 내연차 대상 전환보조금* 신설 등

* (전기차) 신규 구매건은 기존 보조금+ 전환 지원금(대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어린이 통학차량은 대형 최대 1.15억, 중형 최대 8.5백만원, 소형 최대 3천만원 범위로 일반 승합대비 64~100% 추가 지원

* (충전인프라) 주거지역·편의시설 등 생활공간에 전기·수소 충전소 확충을 위한 설치비 지원, 현행 2단계 요금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완속 충전 요금 구간을 신설(30kW 미만 구간) 함으로써, 합리적인 요금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부담 완화

- **(건설·이륜차·전기자전거)** 비도로 부문 이동 수단의 전동화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매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등 이행기반 마련

□ 지자체 소유 주요 관광지 및 도심에 '그린존' 설치

- **(그린존 지정)** 지자체 관광지·도심에 친환경차만 진입 가능한 '그린존'을 설치·운영하여 전기·수소차 운전자의 이용 편의성 강화

- **(제도·여건 구비)** '그린존' 설치 가능 지역 발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전기·수소차 구매 유도

* (예시) 북한산 국립공원 내 사기막 야영장에 내연차 프리존 지정, 전기차, 수소차만 출입 가능 → 내연차 이용객은 북한산성 제1주차장에서 전기셔틀버스 이용

④ [주택·건물] 히트펌프와 연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 건축물 제로에너지화·그린 리모델링 모델 확산

- **(지원근거 마련)** 건물 리모델링 또는 신축건물 인허가 시 태양광, 히트펌프, ESS, 전기차 충전 등 재생e 설비, 충전 인프라를 도입하도록 조례 개정
- **(보조금)** 건물에 적용하는 탄소감축 설비 종류·설치 개수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이자지원)**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이자 일부*(기본 4.5%, 최대 5.5%) 지원 중, 지역내 수요 발굴 및 참여 독려
 - * (대출한도) 주거용: 공동주택 최대 3천만원, 단독주택 최대 1억원, 비주거용: 최대 200억원, 4.5%p :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창호 효율등급 2등급 이상, 5.5%p :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신혼부부고령자차상위계층 등

□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청정화

- **(계획 이행)** 건물 난방 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인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히트펌프 활성화 방안('25.12) 이행 및 예산 지원 추진
 - * 공기열 재생e 지원 근거,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 마련, 기술개발 등 추진('26년)
- **(제도·기반 확충)**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우선지원 대상*을 발굴, 히트펌프 도입 조례 개정 및 인허가 과정 반영 검토
 - * ①연탄·화목등유 등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보일러 사용 가구, ②인구소멸지역·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가구, ③단열 효율이 높은 가구, ④저소득층·취약계층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확대

- *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계획을 적극 시행하는 도시
- **(계획수립·조성)** 공모('24.3~7월)를 통해 선정한 1기 사업대상지(4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26.3)하고 실시설계 후 본격 조성 추진(~'30)
 - * ①(충남 당진) 염해지 태양광, 풍력, 수소암모니아부두, ②(충남 보령) 해상풍력단지,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③(서울 노원) 건물에너지 효율 증대, 도심형 태양광, ④(제주도)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친환경선박 등
- **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민간투자, 기존 정부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하여 전국에 확산
- **(사업체계)** 도시유형별 감축 사업을 목록화하여 실효성 높은 감축 패키지를 벤치마크 모델로 발굴하고 감축량 측정 등을 통한 효과 모니터링

⑥ [흡수원] 나무심기 및 목재 사용 활성화

- 1인 1그루 나무심기 및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참여 여건 확충
 - (실천 확산) 지역 내 1인 1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식재 대상지 발굴, 식재 계획 및 예산 마련, 국민 참여·실천 독려
 - *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지표, 환경 우수 지자체(그린시티) 선정 지표 등에 반영 검토
- 우선구매제도 등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지원제도 확충)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산목재 확인, 우선구매 제도 및 공공 건물(예: 산림청)의 우선적 목조화 추진 확대
 - * 공공은 목재구매량 50% 이상을 국산으로 확인된 목재로 구매 목조건축 랜드마크 조성(22~, 누적 44개소)
-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기반 흡수원 확대
 - (지역특성 반영) 도시·해안가·산악지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가능한 자연기반해법을 수립·적용하여 흡수원 확대
 - * (예시) 덩굴나무 등을 활용한 산사태 방지시설, 건물 벽면 녹화, 빗물 활용을 위한 수로 설치 등
 - (점진적 확대) 자연기반해법의 신규 적용 또는 기존 시설의 대체가 가능한 설비·위치 등을 발굴하고 연차별로 적용 확대 방안을 수립

⑥ [기후적응] 기후적응과 취약계층 지원

-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후 보험 추진 및 확대 기반 마련
 - (도입 추진)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증가에 따라 야외근로자 등 기후 취약계층의 소득 보충과 안전 보장을 위한 기후 보험 도입 추진
 - (로드맵 수립)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보장범위, 상품 종류, 가입 대상, 재원부담 비율 등 보험 도입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 수립(27년 예산(안) 50억원)
-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다각적 사업 추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진행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 (지원체계 마련) 폭염·폭한 전에 냉·난방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할지역 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신청·접수·통지·사후관리 등 담당 체계 구축

□ 한파·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안전 보호

- **(시설 확충)**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야외근로자 쉼터, 결빙 취약지 개선, 취약시설 차열페인트 도장 등 지역 내 한파·폭염 대비시설 설치
- **(예산 확보)** 지역별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단위로 사업공모를 신청하고 지방비 확보(국비: 지방비 5:5) 추진

□ 연탄 난방 전환 지원사업

- **(바우처)** 석탄 보조금 감축('25.8), 국내 석탄 채광 종료('29)에 따라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전환 바우처 지급
- **(관심·참여 제고)** 관할지역 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 전환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이행 지원
- * 기존 연탄쿠폰 수령가구(4.2만) 대상 단열공사·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연탄쿠폰에 준하는 에너지 전환 바우처(57만원) 지급

⑦ **[시민실천·녹색일자리] 기후시민 행동을 통한 감축 확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 탄소중립포인트 등 연계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전개

- **(자발적 참여 확대)** 에너지 사용량 절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녹색생활 실천 등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주민 참여 확대
- **(예산 확보)**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 절감 인센티브 및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지방비 확보
- *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연간 10만원), 자동차 인센티브(연간 10만원) 지급(국비:지방비 5:5)

□ 빅히스토리과 녹색전환 학습

- **(지구-인류 연대 이해 제고)** 빅뱅에서 문명까지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학습, 거시적 관점에서 지구-인류의 연결성과 가치를 이해하는 빅히스토리 교육 추진
- **(교육 여건 마련)** 시·도 교육청, 지역환경교육센터, 전문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발굴·홍보
- **(녹색전환학습)** 녹색생활 실천학교를 지정·지역별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학교 내 녹색생활** 실천을 독려
- * 학교·사회(지역별 거버넌스 구축) 등 전반에 걸쳐 빅히스토리 기반의 교육 추진

□ 지역사회 중심의 녹색일자리 창출

- **(인프라 관리)**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 등과 연관된 건물 자재·시공·감리 및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관련 일자리 창출
 - *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취업 지원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
-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재활용·분리배출, 다회용기 대여·세척 등 주민 참여 기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발굴
 - * (재활용·분리배출)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 은평구 모아모아,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 지구자판기, 한살림, (제로웨이스트협동조합) 대구 세바퀴, 서울도봉 안녕상점 등
- **(시민참여)**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노인, 장애인, 환자, 한부모 가정 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 (참고) 노후 주거지를 정비관리하는 마을협동조합의 초기 사업비 지원, 컨설팅 등(국토부 뉴딜)
- **(기후테크)** 지역 기후테크 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
 - * 기후테크기업 육성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실증 및 인허가 지원, 현장 지원 등 담당

2 감축모델 발굴·확산

1 감축효과가 큰 사업 모델 리스트 구축·제시

-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방법, 모델 등을 목록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 **(모델 목록 제공)** 모델별 감축 효과, 비용효율성, 적용 확장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감축 방법·모델을 선별하고 목록화
 - *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등 부문별 녹색 인프라 사업 위주로 개발
 - **(DB 구축)**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모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검색,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
- 온실가스 감축모델 활용 지침을 제공하고 모델별 감축 효과 모니터링
 - **(참고자료 개발)** 온실가스 감축 모델의 국내·외 적용 사례, 감축성과, 유의사항 등을 수집하고 참고자료 형태로 만들어 배포
 - **(모니터링)**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지역 특성별 감축효과가 큰 사업·모델을 반영하고 연간 이행점검을 통해 감축효과를 모니터링

② 시민실천 연계 감축 모델 발굴 및 감축 연계

- 개인·기업 단위의 실천·참여 기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주민 실천 사업)** 농촌 폐비닐 재활용, 영농형 태양광 설치, 공공 자전거 이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일상속 주민 실천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
 - **(기업 실천사업)** 사무실 내 분리배출 휴지통 설치, 건물 외벽 녹화, 직원용 구내식당 채식 메뉴 도입 등 기업단위 실천활동 전개
- 참여실적 확인용 모바일 플랫폼 개발·인센티브를 제공 등 지역의 실천 독려
 - **(플랫폼 개발)** 활동별 온실가스 감축량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여 개인의 월별 감축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인센티브 제공)** 탄소중립 포인트 등과 연계, 개인의 월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③ 성과 환류

① 17개 광역 시·도 중심 감축 리그 개최 및 포상

-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리그 개최
 - **(유형별 리그)** 배출유형이 유사한 지역 간 온실가스 감축 방법과 성과를 비교하여 상대평가로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리그 개최
 - **(참여단위)** 광역 지방정부가 관할 기초 지역의 성과를 종합하여 리그에 참여하고 배출 총량이 유사한 지역끼리 대진표를 만들어 경쟁을 유도
 - 지역의 감축 성과에 따른 포상 지급
 - **(선정)** 7대 녹색인프라 사업 추진 건수, 온실가스 감축량, 지역의 배출 유형과 감축모델 간의 정합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승자 선정
 - **(포상)** 광역 지방정부가 관할 기초 지역의 성과를 종합하여 리그에 참여하고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사업비, 인센티브 등 차등 지원 검토
- *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27년, 50억) 확보 추진 중

② 지방정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공모델 확산

□ 탄소중립 성과 상향평준화를 위한 우수사례 선정 방법 개선

- **(우수사례 선정평가)** 현행 지방정부 우수사례 평가지표(정성평가)에 온실가스 감축량 등 정량적 평가를 추가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변별력 향상
 - * (현행) 지역 탄소중립 사업의 구체성·충실성, 성과 창출 정도, 지속성 등을 정성평가 (개선) 온실가스 감축량, 전기차 보급대수, 태양광 보급 개소수 등 정량 지표를 추가
- **(지자체 합동평가)**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에 따른 부문별 감축 성과를 정량화하여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행안부와 협의)
 - * (현행)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행 성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참여, 지자체 탄소중립 예산 확보, 차별화된 시책 발굴의 독창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개선) 정량적 성과를 반영하여 우수사례에 선정된 지방정부가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연계

□ 우수사례 포상 및 성공모델 확산

- **(포상)**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탄소중립 이행성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포상*하고 해외 선진사례 탐방기회 등 제공
 - * 기후부 장관상, 환경공단 이사장상 수상, 상위 10개 지방정부에 해외탐방 기회(연 1회) 제공
- **(확산)** 지방정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연 1회) 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
 - * 우수 사례집은 책자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QR code)로 제공

[정책과제 ③] 지원기반 재설계

① 정보 지원

① 지역 온실가스 배출정보·통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

□ 지역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제공

- **(통계 제공)** 지역·분야별(에너지, 산업공정, 하·폐수, 농업, 토지·임업, 폐기물 등) 연간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공

* '10~24년의 배출량 통계 데이터는 '26년 12월 공개, '10~'25년 통계는 '27년 12월 제공 예정

- **(고도화)** 국제 지침을 따라 지역의 배출량을 산정 시 국가별 특성 반영에 한계,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출계수 세분화 및 산정방법론 개선*

* 연료전지의 아산화탄소 배출량 신규 산정 항공연료 배출량 산정식 오류 개선 국가별 배출 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 개발 등 정확도 향상 등(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향후 기후과학원에서('26.10 출범) 추진)

□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활용 기반 강화

- **(시스템 구축)**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GIRS)내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특성 등 상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공개
- **(활용 지원)** 지역 공무원 대상으로 배출정보·통계에 관한 종합 데이터 활용, 배출량 산정 및 통계 작성 방법 등 교육

② 지역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개발 및 제공

□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개발

- **(원단위)** 지역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신규 감축원단위*를 지속 개발하여 제공

* 활동별(예: 자동차 1km 주행시) 1 단위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26.4월 기준 감축원단위 155개를 개발하여 제공, 하반기 20여 개 신규 원단위 추가 개발 등 매년 업데이트

- **(플랫폼 구축)** 지방정부 담당자가 사업별 활동자료(예: 전기차 보급대수 등)를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현재 활동자료를 입력하면 배출량이 계산되어 나오는 엑셀파일을 제공 중으로, 향후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27 상반기, 기후과학원)

□ 지역의 감축 활동별 감축원단위 활용 지원

- **(공유·교육)** 지역별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연계, 지역에서 표준 감축원단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유하고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제공
- **(의견수렴)** 지역별 보정계수 적용, 지역의 신규 사업에 대해 감축원단위 추가 개발 필요성(수요조사) 등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 발전 효율, 재생에너지 도입 비중, 기후,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지역별 감축원단위 차이가 존재하여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 개선

2 예산지원

1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 모든 지방정부에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 **(법개정 추진)** 모든 지방정부에서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개정 추진
- * 20개 지역(광역시 10개 기초 10개)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중출처: 나라살림연구소, '26.3)
- **(제도이행)** 지방정부에서 지역 예산·기금 편성·결산에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이행하기 위한 지침 및 지방정부 조례 등 행정절차 마련

□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

-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지역의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
- **(협력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경험이 있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자문 체계 구축

2 감축 실적을 고려한 예산·인센티브 부여

□ 온실가스 감축량 상대평가 실시 및 보조금(국비) 차등 지원 검토

- **(평가방법)**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상대평가 추진
- **(차등 지원)** 상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지원할 지방정부를 선정, 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부문별 사업예산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 관련 부처 및 사업부서에 중점 지원할 지방정부 목록 제공, 협조 요청 등 검토

□ 온실가스 감축 성과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혜택 제공

- **(인센티브)** 탄소중립 우수 지방정부 선정·시상을 위한 컨퍼런스(연1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1위 지자체에 별도 인센티브 지급
 - * 감축 성과가 우수한 7개 지방정부에 각 3백만원, 6개 지방정부에 각 2백만원 지급 등
- **(혜택)** 지역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모델에 대한 전문 업체 컨설팅, 포상, 지방정부 성과 홍보 지원 등의 혜택 제공

3 역량강화 지원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컨설팅 제공

- 탄소중립에 대한 개별 컨설팅·교육을 제공하여 탄소중립 이행력 제고
- **(지방정부 대상)**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보고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에 연 1회 개별 컨설팅을 제공
 - * 탄소중립 지원센터·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배출 현황 분석, 통계 산정 방법 등 지역 온실가스 감축 성과 측정을 위한 교육 제공(연 2회)
 - **(기업 대상)**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중소·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모델,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제공
 - * 지역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관(표준협회),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중소·영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하는 방안 검토

2 지역 탄소중립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전문성 함양 교육 진행
- **(학위교육)** 지역 거점 대학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후·배출특성, 특화 산업 등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지방청에서 관할 지역 내 지방정부·탄소중립 지원센터 담당자, 지역 기업의 ESG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거점대학에 위탁교육하는 사업 추진 검토(지방청에 사업비 예산 지급)
 - **(실무교육)** 온실가스 감축 모델 적용 방법, 정책 수립, 효과측정 방법 등에 대한 테마별 교육을 매년 진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담당자 양성

V. 기대효과

①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체계·거버넌스 혁신으로 책임감 있는 정책 실행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책임관 협의체 등 지역간 협력 활성화
- 지방정부 내 전담체계 마련으로 지역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향상
- 지역의 예산·인력이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

② 주요 부문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제적 혜택과 삶의 질 향상

- (에너지) 지역의 전력 자립을 향상 및 재생^e 설비를 통한 저렴한 에너지 공급
- (폐기물) 일회용품 감축 및 처리기반 구축 등 지역 내 폐기물 획기적 감축
- (수송) 수송부문 전동화를 기반으로 대기질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
- (주택·건물) 제로 에너지화, 히트펌프 보급 확대 등으로 건물 부문 탈탄소화
- (흡수원)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흡수원 확대를 통한 쾌적한 일상 조성
- (기후적응) 야외근로자·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보호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시민실천·녹색일자리) 시민실천·기후산업 생태계 창출에 따른 일자리 확대

⇒ 2030년까지 아파트 지붕·베란다·농촌에 태양광 약 89만개소 설치
⇒ 전기차·전기버스 274만대 보급, 건설기계 1,355대 전동화
⇒ 건물 히트펌프 약 13만6천대 보급
⇒ 폐기물·하수처리 인프라 411개소 증설 등

③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 온실가스 감축 전문성 향상, 책임감 제고 등 적극적·주도적 이행
- 국가 NDC 달성 기여 및 지역 내 관련 산업 육성·활성화 등